

 미래창조과학부 http://www.msip.go.kr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	
보도일시	2016. 6. 30.(목) 17:00(회의종료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배포일시	2016. 6. 30.(목) 9:00	담당부서	과학기술정책조정과		
담당	황한진 서기관(02-2110-2551)	담당자	김기제 사무관(02-2110-2557)		

**정부, 연구개발(R&D) 예산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전략분야 투자 강화
부처간 벽 허물어 전략기술 확보와 현안해결 공동 대응**
- 국가과학기술심의회, 「정부연구개발예산」,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」 등 5개 안건 의결 -

- 정부는 6월 30일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*(이하 국과심)를 개최하여,
 - 「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(안)」, 「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(안)」, 「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(안)」, 「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(안)」, 「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(안)」 등 5개 안건을 심의·확정하였다.

*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(국무총리, 공동위원장) 및 13개 부처 장관, 중기청장, 과학기술·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(16p 국과심 개요 참고)

-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“과학기술 주도의 제4차 산업혁명, 신(新)기후변화 체제 등 신(新)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절실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
- “정부가 마련한 2017년도 주요 연구개발(이하, R&D) 예산 배분·조정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투자를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,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R&D 시스템을 정비한 데 큰 의미가 있다”고 하였다.

(안전 1)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(안)

-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·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6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0.4%(452억원) 증가한 12조 9,149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아 「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(안)」을 마련하였다.
- 내년도 예산 배분·조정(안)은 ① 과감한 지출구조정, ② 전략적 재투자, ③ R&D 시스템 정비 등 3개의 혁신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.
 - 먼저, 각 부처는 “16년도 예산의 10%를 자체 구조조정하여 약 1.2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, 전략본부는 평가결과 반영 등 투자 효율화를 통해 7%를 추가적으로 절감하였다.
 -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전략, '17년도 투자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구, 4차 산업혁명, 기후변화 대응 등에 7,000억원을 재투자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('16.5.12)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였다.

< 중점 투자분야 >

- 개인·집단지초연구 : ('16) 11,041 → ('17) 12,643억원 (14.5% 증)
- 청정에너지 : ('16) 4,536 → ('17) 5,915억원 (30.4% 증)
- 4차 산업혁명 : ('16) 3,147 → ('17) 4,707억원 (49.6% 증)
- 미래성장동력(10대) : ('16) 9,128 → ('17) 10,836억원 (18.7% 증)
- 바이오신산업 : ('16) 4,737 → ('17) 5,116억원 (8.0% 증)
- 재난·재해안전 : ('16) 7,405 → ('17) 7,841억원 (5.9% 증)

- 또한,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‘부처매칭형 협업모델’을 새로 도입하고, 산학연 역할분담**에 따른 차별적 지원, AI-로봇 등 기술 융합 분야에서 부처 간 공동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,
- 국방R&D 예산을 국과심의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·군간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융·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키도록 하였다.

*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는 ‘하나의 사업’ 추진(공동성과, 공동책임, 공동관리)

** (學) 기초연구, 인력양성 / (研) 중장기 원천연구 / (産) 성장단계 맞춤형연구

- 이번에 확정된 ‘17년도 정부R&D사업 예산 배분·조정(안)은 지난 3월 발표된 「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」 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6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5명*이 심층 검토한 후 이번 국과심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.

* 6개 기술분야 전문위 : 공공우주(16명), 에너지환경(16명), 기계소재(16명), ICT융합(16명), 생명의료(15명), 기초기반(16명)

- 동 「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(안)」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, 기재부는 국방·인문사회 R&D 등의 예산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(안)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.

(안전 2)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(안)

-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「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」 후속조치로 미래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「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」을 심의·확정하였다.
- 동 계획에 따라, 정부는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국제 기술력 순위 제고,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, 3대 전략 및 11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.

- 무인이동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,

- 민간이 요구하는 육·해·공 공통 적용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고,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.
- 부품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연연·대학 주도로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, 무인이동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안전제도를 정비한다.
- 5G 등 ICT 신기술을 조기에 적용해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한다.

- 무인이동체 분야별 생태계 조성을 위해,

- 무인기 분야는, 국방, 재난, 교통 등 공공수요 기반 기술개발 지원, 전용공역·시험설비 등 인프라 확충, 소형무인기 통신용 비면허 주파수 추가 등을 실시하고,
- 자율주행자동차는, 8대 핵심부품 개발, 자율주행 지원도로 전국 확대, 차량간·차량-인프라간 전용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.
- 무인농기계 분야에서는, 무인제초기 영농현장 실증시험 및 시범보급과 정밀농업 구현 및 실증을 위한 과학영농 시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,
- 수중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및 실 해역 검증, 소형 무인선 시스템 개발, 전용수역 조성 및 무인선용 통신 주파수 할당 검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.

- 체계적·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(위원장: 미래부 1차관)를 보다 활성화하고, 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 수립, 공공혁신조달 도입 등도 추진한다.

(안전 3)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(안)

- 「제2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('16~'20)」 -

□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미래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「**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 - 제2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-**」을 심의·확정하였다.

- 정부는 2011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부처 별 소관자원을 중심으로 동물, 식물, 미생물, 인체유래물, 생명정보 등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·관리하여 왔으며,
- 확보한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산·학·연 연구자에게 분양·활용하도록 하여 바이오 R&D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.
 - ※ SCI(E) 논문(생산·인용) : 475편('11년) → 1,136편('15년)
 - ※ 국내·외 특허 : 21건('11년) → 63건('15년)

□ 이번에 수립된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은 △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, △생명연구자원의 이용가치 제고, △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- 우선 감염병 등 글로벌 이슈,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수요, 산업적 잠재력, 한국적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**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을 선정**하고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, 전략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확보·운영방안을 수립한다.
 - ※ '16년 10대 자원 → '18년 20대 자원 선정 추진, 5년 단위 전략자원 조정
- 또한 **자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용자원***을 개발·공급하고, 자원 관리기관의 개방형 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및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**자원 활용 극대화**를 추진한다.
 - * 주요 기능별 유전자클론 패키지 개발, 분류별·목적별 균주 패키지 제작, 유전자변형마우스(GEM), 형질전환미니돼지 등

- 아울러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(KOBIS)의 고도화, 나고야 의정서 이행 관련 법·제도 정비 및 해외 자원거점 확대 등 생명 연구자원 관리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.

(안전 4)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(안)

- 앞으로 국방 R&D도 다른 일반부처 R&D와 같이 국과심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**국과심 내 국방전문위원회가 설치·운영**된다.
- 국방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사전심의를 통해 **국방 R&D와 민간 R&D간 중복투자 방지 및 융복합 촉진**으로 투자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.

(안전 5)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(안)

- 과학기술을 통해 문화융성 핵심정책인 '**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**'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부, 문체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'**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**'을 보고하였다.
- 동 전략에 따라, 정부는 **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·고부가가치화를 통한 '코리아 프리미엄' 창출과 '문화융성'을 촉진**하기 위해 전통문화 자원과 첨단과학기술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,
- 2025년 전통문화 기반 신시장 **창출 1.4조원, K-Product 신제품 20개 창출**을 목표로,
- ▲ 전통문화산업 고도화 지원, ▲ 전통문화 원리 기반 신시장 창출, ▲ 전통문화산업 R&D 활성화 기반 구축, ▲ 과학기술 융합 제품·기술의 대중화 촉진 등 **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**할 계획이다.

□ 우선, **5대 전통문화산업 분야**(공예, 의류, 식품, 건축, 예술)에서 시장 잠재력은 높으나 **실용성·품질, 높은 가격 등 산업화 한계**에 직면한 전통문화 제품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**기술적 한계를 극복***하고,

* <예> (공예) 녹슬지 않는 유기, 피부과민 없는 속건성 옷칠, (의류) 기능성 천연섬유, (식품) 항미조질 인삼소재, 숙성증류주, (건축) 고속건조 방부목재, 대공간 한옥, 고효율 세라믹 온돌, (예술) 전통음악 실용성 연구, 전자국악기, 수치해석 기반 新전통문양 등

○ 전통 기법·소재, 자산과 첨단기술 융합으로 **인간·환경·생활 친화형 신시장·제품*과 新문화상품·서비스 창출**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<예> (생활·건강) 천연염색 디지털프린팅, 전통발효 프로바이오틱스, (친환경건축) 3D프린팅용 천연소재, 전통명유 마감제, (첨단소재) 전통제철 기반 고강도 금속소재 등

□ 또한, 산·학·연 기술협력 허브인 ‘**전통르네상스지원단**’을 신설하여 산업계 기술애로 해소, 지식재산권 확보, 인재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,

○ **첨단기술 융합 신제품**(‘전통기술 프론티어’) 발굴 및 유통·마케팅 지원, **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** 등 대중화·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.

[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상정안건별 담당자 연락처]

	안 건 명	담당자
1	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(안)	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 배석희 서기관(02-2110-2623) 김단호 사무관(02-2110-2624)
2	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(안)	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김정훈 사무관(02- 2110-2436)
3	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(안) - 「제2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(‘16~’20)」 -	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윤지영 사무관(02- 2110-2395)
4	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(안)	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김기제 사무관(02-2110-2557)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 오정택 사무관(02-2110-2626)
5	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(안)	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장두원 사무관(02-2110-2413)

※ 별첨 : 안건 요약자료 각 1부

안전 1. 「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(안)」

◆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,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, 新다부처 협업모델 도입, 산학연 역할 분담 등 R&D시스템 정비 병행

① '17년도 주요 R&D 규모

- '16년도(12조 8,742억원) 대비 452억원(0.4%) 늘어난 12조 9,194억원 수준

② 주요 특징

- (지출 구조조정) R&D 예산의 17% 구조조정 실시 ⇒ 약 2.2조원 절감
※ 각 부처 자율 구조조정(10%, 1.2조원), 전략본부 투자효율화(7%, 1.0조원)
- (전략적 재투자) 국가 전략분야를 도출*하여, 핵심사업 선별·투자
* 중장기 투자전략, '17년 투자방향,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(R&D 시스템 정비)

- (다부처 R&D사업)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新협업모델(부처매칭형) 도입

現 유형	<부처 매칭형> 신규 도입	개선 後 유형
① 개별 전문기관형 ② 단일 전문기관형 - 참여부처별 사업은 별개 구성	+ •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이 "하나의 사업" 공동 추진 - 부처별 자원 분담, 단계적 확대	➡ ① 개별 전문기관형 ② 단일 전문기관형 ③ 부처 매칭형

※ 주요 R&D 예산 협업사업 비중 : '16년 2.8%(10개 사업) ⇒ '17년 10.2%(15개 사업)

- (산학연 역할분담) 연구개발주체의 고유미션*에 따른 차별적 지원

* (學) 기초연구 ⇔ (研) 중장기 원천연구 ⇔ (産) 성장단계 맞춤형

- (국방 R&D) 국과심 사전심의 도입, 민·군 기술 융·복합 활성화

③ 중점 투자분야

- (기초연구 확대) 개인·집단기초연구 확대 및 매칭형 협업사업 추진
- (경제혁신 선도) 4차 산업혁명 대응, 미래성장동력, 바이오신산업 강화
- (국민행복 실현) 재난재해·안전, 기후변화 대응 분야 투자 확대

안전 2.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

◆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, 육·해·공 통합적 관점에서 무인이동체 발전전략 수립

① 무인이동체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 효율성 제고

- (공통기술 개발) 육·해·공 공통 적용기술 개발,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 기술개발 및 다부처 참여 프로젝트* 추진
* 재난·치안 임무용 무인기(안전차산입부·대부경철형), 무인기(무인선 통합 운영체계 구축·국토부·대부해수부 등)
- (부품중소기업 육성) 출연연·대학 주도로 무인이동체 기반기술 개발·보급,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및 SW 플랫폼 개발·보급
- (안전성 향상) 무인이동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안전제도 정비 및 사용자 대상 교육·홍보 강화 추진
- (글로벌 테스트베드) 혁신제품 개발 및 실제 운용환경에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(Test Bed) 환경 제공

② 분야별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

- (무인기) 국방, 재난, 교통 등 공공수요 기반 기술개발 지원, 전용공역·시험설비 등 인프라 확충, 소형무인기 통신용 비면허 주파수 추가 등 추진
* 무인기사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, 국민안전·안보 등 저해하지 않는 사업은 모두 허용
- (자율주행차) 8대 핵심부품* 개발, 시범도로 테스트베드 구축, 자율주행 지원도로 전국 확대, 차량간·차량-인프라간 전용 주파수 확보 등 추진
* 레이더(라이다), 영상모듈, V2X 통신모듈, 디지털 맵, 복합측위모듈, 운전자 차량 인터페이스 모듈, 자율주행기록장치(ADR), 차세대 차량네트워크(VN) 도메인 컨트롤 유닛
- (무인 농기계) 무인제초기 영농현장 실증시험 및 시범보급, 정밀농업 구현 및 실증을 위한 과학영농 시범단지 조성 등 추진
- (무인 수중이동체 및 무인선) 수중이동체 핵심기술 개발(1단계) 및 실 해역 검증(2단계), 소형 무인선 시스템 개발, 전용수역 조성 및 무인선용 통신 주파수 할당 검토 등

③ 범정부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

- 범부처 무인이동체 발전협의회(위원장 미래부 1차관) 활성화, 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 수립, 공공혁신조달 도입(조달계획·기술개발·조달구매) 등 추진

안건 3.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 - 제2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('16~'20) -

◆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활용, 생명연구자원의 이용가치 제고 및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

1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

- 감염병 등 글로벌 이슈,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수요, 산업적 잠재력, 한국적 희소성 등을 고려한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
- 부처별 소관분야 및 전문성에 따라 자원별 간사부처를 지정하고 학문적·산업적 파급영향을 고려한 확보·운영방안 수립

2 생명연구자원의 이용가치 제고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·생산된 생명연구자원 기탁·등록 활성화로 고품질 자원의 공동활용 촉진 및 R&D 생산성 제고
- 자원별 특성분석을 통해 자원 가치를 제고하고 특성정보 기반 유용자원 개발·공급으로 자원의 활용성 증대, 관련기술 개발
 - ※ 주요 기능별 유전자클론 패키지 개발, 분류별/목적별 군주 패키지 제작, 유전자변형마우스(GEM), 형질전환미니돼지 등
 - ※ 다중성분 통합평가 원천기술 개발, 유전체정보 활용 맞춤형으로 원천기술 개발 등
- 자원관리기관의 기업 지원을 위한 개방형 연구지원 시스템 운영, 벤처/중소기업 연구개발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지원
 - ※ 유용자원 초고속·대용량 탐색, 유전체 정보해독기술, 해외 수입소재 대체자원 탐색기술, 보존 및 안전관리기술, 자원 증식 및 실용화기술 등

3 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 고도화

-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관련 법령 정비 및 생명연구자원의 연구·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·규제 개선
- 중남미(중 다양성), 중동·아프리카(신종 감염병) 등 미개척지역의 해외거점 확대 및 호혜적 이익공유모델 개발 등 국제협력 강화

안건 4.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

◆ 국방분야 R&D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를 위해 국방전문위원회 설치

□ 추진배경 및 현황

- 국방 R&D예산은 약 2.6조원('16년 예산기준) 수준으로 이제까지 기재부에서 심의·편성해 왔으나(국과심 심의대상에서 제외)
- 국과심 심의대상인 일반부처 R&D와의 유사·중복 가능성, 민군기술의 융·복합을 통한 성과확산 미흡 등이 지적

* 일반부처 주요 R&D : 부처요구 ⇒ 국과심 심의 ⇒ 기재부 최종편성
국방 R&D : 국방부 및 방사청 요구 ⇒ (국과심 대상 아님) ⇒ 기재부 편성

- 이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, 국방 R&D중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**다른 일반부처 R&D와 같이 국과심 사전심의를 받도록 개선**

※ 국방 R&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던 **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**(16. 7. 1. 시행)

□ 주요내용

- 국방 R&D도 국과심 심의대상이 됨에 따라 국과심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심의* 수행을 위해 국과심 운영위 산하에 '**국방 전문위원회**'를 신설함

* ① 국방 분야 국가R&D사업의 기술 융·복합화 촉진 및 ② 다른 분야 국가 R&D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 투자 효율성 제고

⇒ 이로써 국과심 운영위 산하에 전문위원회가 9개→10개로 증가

안건 5.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

◆ 전통문화·현대과학기술 융합을 통해, 전통문화에 내재된 가치의 산업화·고부가가치화('코리아 프리미엄' 창출) 및 '문화융성' 촉진

※ 2025년 전통문화 기반 신시장 1.4조원, K-Product 신제품 20개 창출

① 전통문화산업 고도화 지원

- 시장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제품에 **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**(품질·실용성·생산성 제고), **실생활용품화 촉진 및 성장 잠재력 확충**
- 전통공예 소재·공정 혁신, 천연의류 가격·기술 경쟁력 강화, 전통식품 기능성·부가가치 제고, 전통건축 자재·시공 첨단화, 전통 음악 및 디자인 대중화 촉진 등 5대 전통문화산업 분야 기술혁신 추진

② 전통문화 원리 기반 신시장 창출

- 전통 소재·기법과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**인간·환경·생활 친화형 신제품** 개발로 **생활·건강, 친환경건축, 첨단소재** 분야 신산업·시장 창출
- 전통문화와 연계한 **융·복합 콘텐츠, 관광·전시, 스토리텔링**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, **문화·예술·역사적 가치 기반 新문화상품·서비스** 창출

③ 전통문화산업 R&D 활성화 기반 구축

- (기술협력 촉진) 산·학·연 기술협력 허브 및 R&D 기반조성 역할을 수행할 '전통트네상스지원단' 신설, R&D정보인프라 구축 및 기술표준화 추진
- (R&D역량 강화) 현장 기술애로 해소 및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지원(현장 1:1자문 등), 단계별 지식재산화, 문화·기술 융합인력 양성 지원

④ 과학기술 융합 제품·기술의 대중화 촉진

- (대중화 촉진) 첨단기술 융합 신제품(전통기술 프론티어) 발굴 및 유통·마케팅 지원(정책매장, 인터넷, 대기업유통망 등), 소비자체험 강화(지하철 등) 추진
- (혁신센터 연계) 지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는 혁신센터가 R&D 기획부터 참여(지역유망기업 R&D 참여 등) 및 R&D 성과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

참 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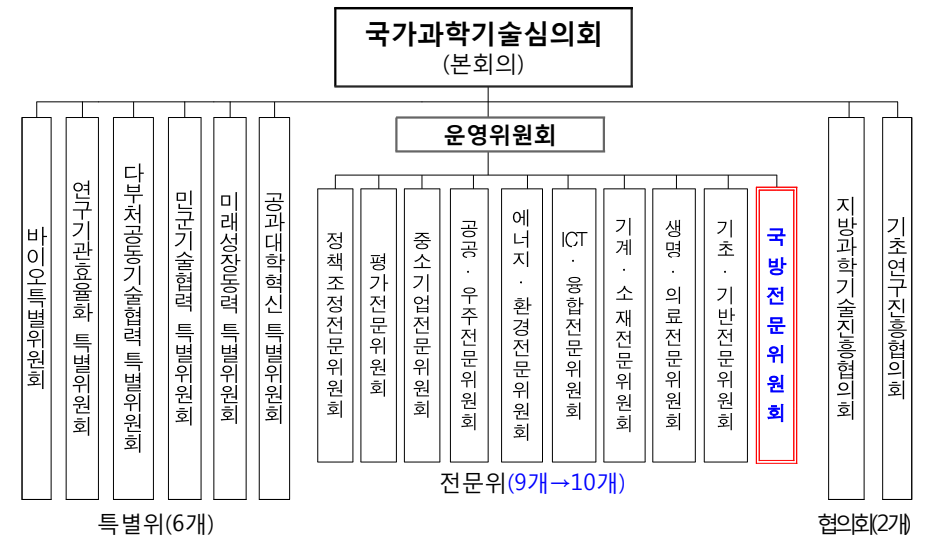
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요

□ (근거)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

□ (구성) 위원장(국무총리·공동위원장), 정부위원(14명), 민간위원(9명)

구 분	구 성
위 원 장 (2)	국무총리, 공동위원장
정부위원 (14)	기재부·교육부·미래부(간사위원)·국방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국토부·해수부·안전처 장관, 국무조정실장, 중기청장
민간위원 (9)	과학기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

※ 심의회 산하에 운영위, 특별위(6), 협의회(2), 전문위(9→10)를 설치·운영



□ (주요 기능) 과학기술 주요 정책·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·지역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조정,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,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

※ 운영위원회 : 심의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 자문

※ 특별위원회 : 심의사항 중 특별한 사안 사전검토 및 실무적 자문

※ 진흥협의회 : 지방과학기술 진흥 및 기초연구 투자 정책 등을 심의